

한국인과 일본인의 기관신뢰와 민주주의 인식*

이숙종 _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IV.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민주주의의 평가에 따른 공적기관의 신뢰수준에 대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한국은 동아시아연구원이 진행한 2017년 6월 11일부터 29일까지의 설문조사를, 일본은 겐론 NPO가 실시한 2017년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한국은 대통령(수상), 행정부, NGO 기관에 대해서 일본보다 신뢰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법원, 정당, 의회, 군대(자위대), 경찰, 언론, 민간 기업에 대해서 한국보다 신뢰수준이 높았다 민주주의 성과평가는 자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양국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국의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자국의 민주주의를 민주적이라고 인식할수록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6S1A3A2924832).

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민주주의의 평가와 기관신뢰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한일 간 신뢰와 민주주의 간의 부족했던 실증연구에 기여하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한일비교, 여론, 기관신뢰, 민주주의 성과, 민주주의

.....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공고화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이다. 양국 모두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민주주의 지표(Democracy Index) 조사에서 지난 십년 동안 완전민주주의 수치 8점에 근접해 소폭 변동만을 보여 왔다.¹⁾ 에서 한국은 대통령중심제를 일본은 내각책임제를 정치체제로 수용한 이래 이들 국가에서는 헌정질서가 잘 수호되어져 왔고 국민의 행태나 태도 역시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모두 정치 불신이 매우 높고, 특히 입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부나 행정부에 비교하여 높다. 의회에서 좋은 법과 건전한 정책이 만들어지기 보다는 당리당락을 따라 정쟁을 일삼고, 주요 정당들도 건전한 정책 대결보다는 계파 간 이합집산이 여전히 정당의 이름이 수시로 바뀐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정부 또는 행정주도로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로 시장경제와 시민사회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문제의 해결사로 나서길 대중은 기대한다. 그렇다고 양국 정

1) EIU Democracy Index에 의하면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한국은 10점 만점 지수에서 한국은 7.88점에서 8.13점 사이를, 일본은 7.96점에서 8.25점 사이를 오갔다. <https://www.eiu.com/topic/democracy-index> 참조.

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 편은 아니다. 한일 각국의 정부에 대한 신임을 보면 OECD 국가 평균치보다 낮다.²⁾ 정부 신뢰는 자국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나 믿음과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부 신뢰가 저하되면 체제에 대한 믿음도 떨어진다. 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거나 증대된다면 정부나 정치에 대한 신뢰결손에 완충적 역할을 해줄 수 있어 전체적인 사회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본 논문은 한일 양국민이 갖고 있는 사회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알아보고 이러한 신뢰 인식이 자국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 . 서론

신뢰연구에서는 학문적 지향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정의를 통상 받아들인다. 즉, 상대방의 의사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바탕으로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의사나 의지라는 것이다.³⁾ 상대방의 의도나 행동에 스스로 취약해질 수 있는 위험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요소로 인해 신뢰를 일종의 투자행위로 간주하는 학자들도 있다. 신뢰를 주는 이는 어디까지나 사람이지만 신뢰를 받는 상대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개인

2) 2014년도에 정부는 신임하는 국민의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이 42%였지만 일본은 39%, 한국은 34%에 그쳤다. 2007년도에 비교해서는 일본은 15%, 한국은 10% 높아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http://www.oecd.org/governance/public-governance-a-matter-of-trust.htm> 참조.

3)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1995);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 & Camerer, C.,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1998).

이나 조직, 또는 제도 일반일 수 있다. Rousseau는 법 체제나 문화와 같은 제도적 신뢰는 불신을 줄이고 협력을 증대시켜 관계적 신뢰가 발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⁴⁾ 그들이 말하는 관계적 신뢰란 통상 익명의 타자를 향한 나아가 사회일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로 가름되는 개념인데 제도적 신뢰가 사회신뢰에 순기능적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반대 방향의 영향도 작동한다. Taylor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신뢰는 개인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는데 시민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명확히 자각할수록 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정부 시책에 순응도도 높아진다고 주장한다.⁵⁾

한편 Putnam을 비롯한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신뢰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낮추어 협동과 연대를 도모하는 대표적 사회자본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이로 인한 경제발전이나 정부성과를 증진한다고 주장해 왔다.⁶⁾ 사회자본이 정부 정책과 규제를 실행하는 비용을 감소시켜 정부 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정부 성과론의 하나로 자주 주장되는 것이다. 한편, 정책 입안자나 관료 엘리트들도 공동체 가치를 의식하게 되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연대감을 만들어 내 주인, 즉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동기가 작동해 관료적 효율성을 기할 것이라 주장된다.⁷⁾ 사회자본 가운데 특히 신뢰가 보편화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을 보여 정부성과를 높이는 경향이 있음이 발견되기도 하지만⁸⁾ 사회신뢰

4)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 & Camerer, C.,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1998).

5) Tyler, T. R., “Trust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Braithwaite V and Levi M, editors(ce). *Trust and governance* (Russel Sage Foundation)(1998).

6) Putnam, R.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7) Boix, C. & Posner, D. N., “Social capital: Explaining its origins and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4)(1998).

8) Knack, S.,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02).

와 정부성과와 관계는 여전히 충분히 증명되지는 못했다. 사회신뢰에 비교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정부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연구된다. Newton & Norris는 많은 나라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는데, 이는 정부와 정치적 기관들의 성과가 낮아졌기 때문임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⁹⁾ 이러한 기관이나 제도적 신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은 아니다. Braithwaite는 제도를 가치체계에 따라 다른 규범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번영 등의 안전가치를 중시하면 교환규범에 따라서,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화가치를 중시하면 공동체규범에 따라 신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¹⁰⁾ 안전가치 차원에서 민주주의는 질서정연하고 일관적인 성과사회 구성원에게 복리를 제공하는 신뢰성이 있어야 신뢰를 얻을 것이며, 조화가치 차원에서 민주주의는 평등성이나 사회적 정의 같은 것이 작동되어야 신뢰를 얻을 것이다.

기관들에 대한 신뢰는 궁극적으로 그들 기관들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과 밀접히 관련된다. 법원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을 시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도 낮을 것이다. 공고화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현직 정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도 통상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다.¹¹⁾

9) Newton, K. and Norris, N.,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Faith, Culture, or Performance?" in Susan Pharr and Robert Putnam (eds),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2000).

10) Braithwaite는 기관신뢰를 비교하면서 대법원이나 준비은행에 대한 신뢰는 예측성, 일관성과 같은 교환규범에 따라, 가정법원이나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는 공동체규범에 따라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Braithwaite, V., "Communal and exchange trust norms: Their value base and relevance to institutional trust", In Braithwaite V and Levi M, editors(de), *Trust and governance* (Russel Sage Foundation, 1998).

11) Almond, G. & Verba, S.,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나라마다 권력구조가 다른 만큼 어떤 기관에 대한 신뢰가 민주주의 체제 신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지는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에서 기관신뢰와 민주주의 체제 신뢰가 어떻게 다른지, 민주주의 체제 신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기관신뢰는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한일 양국에서 동일한 질문으로 서베이를 실시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러한 비교 연구를 위한 체계적 자료를 얻기는 쉽지 않다.

탐색적 연구를 위해 본 논문은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의 겐론(言論) NPO가 실시한 서베이 자료를 사용해 한일 양국 시민의 주요 공적기관 신뢰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 그리고 기관신뢰와 민주주의 체제 신뢰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 설문조사는 한일 양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은 1,003명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11일부터 2017년 6월 29일까지, 일본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17일부터 2017년 7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각 변수별 빈도를 확인하여 한일 양국의 시민 인식을 확인한다.

Ⅱ . 이론적 논의

1. 신뢰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한 국가 시민들의 신임이 요구되는 정체제도이면서, 시민들의 불신을 제도화한 체제이기도 하다.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바탕으로 공동체가 봉착하는 불확실성이나 위협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통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력 혹은 권한을 선출직에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을 제도화한 체제이기도 하다.¹²⁾ 이와 같이 민주정치제도

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한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는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해당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주의 인식수준에 따라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자본 연구에서 추동된 신뢰연구는 신뢰자와 피신뢰자의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신뢰자와 피신뢰자 간의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느냐에 따라 신뢰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면서 사라지기도 한다.¹³⁾ 이들 간에 신뢰하는 관계가 구축이 되면 신뢰자는 피신뢰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감수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되고,¹⁴⁾ 이를 통해 상호 간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진행되면서 신뢰는 확장되고 견고해진다.¹⁵⁾

일반적인 사회신뢰와 정부 기관신뢰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자들마다 상이한 주장을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사회신뢰와 정부기관 신뢰를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¹⁶⁾ 정부신뢰를 사회신뢰가 확장되는 개

-
- 12) Braithwaite, J., "Institutionalizing distrust, enculturating trust", In Braithwaite V and Levi M, editors(de). *Trust and governance* (Russel Sage Foundation, 1998); Sztompka, P., *Trust: A sociologic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13) Levi, M., "A state of trust", In Braithwaite V and Levi M, editors(de). *Trust and governance* (Russel Sage Foundation, 1998).
- 14) Luhmann, N., "Familiarity, confidence, trust: Problems and Alternatives", In D. G. Gambetta (de).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New York: Basil Blackwell, 1988).
- 15) Ostrom과 Ahn은 참여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로써 상호 간의 신뢰가 향상된다는 논리적 구조를 제시한다.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의 구성은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대면을 의미한다. 신뢰자와 피신뢰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면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Ostrom, E. and Ahn, T. K., *Foundation of Social Capital*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03).
- 16) 사회신뢰와 정부기관의 신뢰의 차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회신뢰는 개인간의 이해관계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뢰가 확장되기도 하지만, 철회될 수도 있는 측면을 강조한다. 반면 정부기관 신뢰는 공동체 구성원이 정부기관과 상호작용하기 보다는 기대(expectation)만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임(confidence)으로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한다. Luhmann, 1988; Heimer, C. A., "Solving the Problem of Trust", K. S. Cook, *Trust in Societ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2001); 한준, 「민주주의, 제도와 신뢰」, 『신뢰연구』 13(2), 2003.

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타인을 신뢰할수록 법이나 정치제도 수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신뢰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신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¹⁷⁾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정부기관들이 집행하는 일련의 정책을 수용할 의지가 높아서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킨다고 본다.

그렇다면 신뢰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신뢰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자본은 공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가능 및 활발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자본을 일컫는다. 흔히 사회자본의 구성개념은 학자들마다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신뢰와 네트워크, 호혜성의 규범으로 제안한다.¹⁸⁾ 이러한 사회자본이 어떻게 형성되고 구축되는지에 대한 접근은 한 국가 공동체의 시민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회 중심적(society-centered) 시각과 민주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제도 중심적(institution-centered) 시각 등의 2가지로 나뉜다.¹⁹⁾

첫 번째로 사회 중심적인 접근 방법은 미국 민주주의의 전통이 결사체가 중심이 되는 시민사회의 영향이라고 지목한 토크빌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한 국가의 공동체 구성원이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함으

17) Brehm, J. & Rahn, W.,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1997); Mishler, W. & Rose, R., "What are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Testing institutional and cultural theories in post-communist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1)(2001); 장수찬, 「한국 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한국정치학회보』 36(1), 2002; 이수인, 「정부신뢰에 대한 정치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효과 비교와 관계성의 탐색: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9(2), 2013. Heimer는 신뢰와 불신이 취약성(vulnerabi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 신뢰자에 대한 피신뢰자의 의무(obligation), 신뢰자의 권리(right)를 포함하지만, 신임(confidence)은 이 중에서 취약성과 불확실성의 두 가지만을 포함시킨다. 즉, 신뢰는 신임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Heimer(2001), p. 46.

18) Putnam(1993).

19) 장수찬, 「한국 사회의 신뢰수준의 하락과 그 원인: 국가 간 비교 분석적 관점에서」, 『세계지역연구논총』 25(3), 2007.

로써 사회적 학습 과정을 경험하고, 상호 간에 정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규범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회자본 논자들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결사체의 멤버십을 통하여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집단행동이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²⁰⁾

두 번째로 제도 중심으로 사회자본을 접근할 경우에는 민주주의 성과라는 구조적 측면에 의하여 신뢰가 구축되고 향상된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의 전통을 시민사회의 활성화로 제시하였다면, 제도주의자들은 법치(rule of law)가 미국 민주주의를 태동시키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²¹⁾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법의 규정을 사회 구성원들이 지키기로 합의함으로써 공적 신뢰가 생성될 수 있다는 인과적 관계를 언급한다. 이들에 의하면, 민주적 정치구조에 따라 상호 간의 신뢰가 향상되고 나아가 정부는 법의 이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한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가 구축되는 원인으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민주주의 성과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제도주의자들은 공적인 신뢰가 만들어지는 배경을 특정 국가의 민주적 성과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한다.²²⁾ 국내 연구에서도 단체참여보다는 정치제도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바 있다.²³⁾ 이 연구는 한 국가 공동체 내의 신뢰 형성은 제도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토대로 공공

20) Coleman, J. 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1988); Putnam(1993).

21) Whittington, K. E., "Revisiting Tocqueville's America: Society, politics, and associ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1)(1998).

22) Rothstein, B. & Stolle, D., "Introduction: social capital in Scandinavia",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6(1)(2003); Stolle, D., "The Sources of Social Capital," in Marc Hooghe and Dietlind Stolle(eds.),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23) 박종민·김왕식,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 2006.

기관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2. 선행연구 탐색

민주주의와 신뢰를 분석한 연구들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많이 이루어졌다. 국가별 비교 차원에서 이 두 개념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민주주의와 연관된 변수들을 선정하여 각 변수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신뢰와 정치적 신뢰 간의 관계를 확인하거나,²⁴⁾ 한국과 덴마크를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신뢰, 정치적 효능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기도 한다.²⁵⁾ 그리고 Zmerli & Newton은 23개의 유럽국가와 미국을 대상으로 사회신뢰와 정치기관 신임(confidence)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해보고, 이 두 변수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²⁶⁾ 이 외에도 유럽에서는 시민들이 인식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 및 정치적 성과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가 하면,²⁷⁾ 직접 민주주의와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간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연구들이 더러 있다.²⁸⁾

24) Newton, K.,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2001).

25) Kim, U., Helgesen, G. & Ahn, B. M., "Democracy, Trust, and Political Efficacy: Comparative Analysis of Danish and Korean Political Culture", *Applied Psychology* 51(2)(2002).

26) Zmerli, S. & Newton, K., "Social trust and attitudes toward democracy", *Public opinion quarterly* 72(4)(2008).

27) Amingeon, K. & Guthmann, K., "Democracy in crisis? The declining support for national democracy in European countries, 2007-2011",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3(3)(2014).

28) Bauer & Fatke와 Freitag & Ackermann은 모두 스위스를 대상으로 직접 민주주의와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Bauer & Fatke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관에 참여할수록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공공의 이

국내에서 신뢰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이론적 혹은 규범적으로 이 두 관계를 분석하는가 하면,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이 두 개념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신뢰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를 이론 및 규범적으로 알아보려는 연구들이다. 이재열은 사회자본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한 후에 사회자본의 긍정적·부정적 기능을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사회자본 역할 및 향후의 과제에 대해 논하였다.²⁹⁾ 박성진은 신뢰와 민주주의 공고화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확인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신뢰의 역할을 탐색하였다.³⁰⁾ 한준은 제도와 신뢰와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면서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³¹⁾ 마지막으로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제안한 김세은의

익을 대변하지 않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인식하여 정치신뢰(political trust)를 하락시켰다고 증명하였다. 이와 반면 Freitag & Ackermann은 개인의 특성과 직접 민주주의의 경험이 상호작용하여 지방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Bauer, P. C. & Fatke, M., "Direct democracy and political trust: Enhancing trust, initiating distrust—or both?",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20(1)(2014); Freitag, M. & Ackermann, K., "Direct democracy and institutional trust: Relationships and differences across personality traits", *Political Psychology* 37(5) (2016).

- 29) 이재열,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 사상』 37, 1998.
- 30) 박성진, 「한국 사회 신뢰의 악순환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동향과 전망』 58, 2003.
- 31) 한준이 제시한 3가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제도의 객관적인 성과에 대한 하락을 가져와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제도의 개혁이 수반되고 이로써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낳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제도적 성과가 하락되고 시민들은 공적기관에 대하여 불신하게 된다. 두 번째로 권위주의 혹은 약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시민들에게 잘못 부여된 신임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서 사라진다는 점이다. 권위주의 혹은 독재 체제에서는 공적기관에 대한 의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각종 언론을 통해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과거의 신임을 철회하는데, 이러한 연유에 따라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는 하락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의 개선 혹은 제도 개혁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 때에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는 저하된다. 이러한 요인은 제도의 객관적 성과가 하락된다는

연구는 한국의 언론이 ‘좋은’언론보다는 절차적으로 공정한 ‘옳은’언론을 지향하여 한국 사회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언론이 지향해야할 방향성을 제안하였다.³²⁾

두 번째로 국가 간의 비교를 데이터를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한 연구들이다. 장수찬은 한 사회의 대인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65개국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³³⁾ 이재혁은 한국과 미국의 종합사회조사를 토대로 양국 간의 사회신뢰, 제도신뢰, 결사체와 참여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³⁴⁾ 그의 연구에서는 한미 비교를 통해 사회 및 제도 신뢰의 차이점을 확인하였고, 양국 모두 사회신뢰가 높은 집단이 시민사회의 결사체와 행동에 있어서 더 높은 참여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냈다. 그리고 송경재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을 대상으로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성취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는데, 한국은 의회의 신뢰수준, 일본은 의회 신뢰수준과 시민운동의 신뢰수준이 민주주의의 발전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증명하였다. 안승국은 아시아의 6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신뢰 및 정치신뢰가 민주주의의 지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³⁵⁾

이와 같이 신뢰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이론

첫 번째 원인과는 상이하게, 실제로는 객관적 성과가 올라가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한준(2003).

- 32) 김세은은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언론을 5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①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한 5·16이전, ②한국 언론이 정부권력에 종속된 5·16 이후, ③시장에 강한 영향을 받은 1987년 6·29 이후, ④언론이 이념적 지향성을 드러내면서 정당과 병행관계를 맺으면서, ⑤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치권력과 미디어별 병행주의 등이다. 김세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신뢰: ‘옳은’ 언론과 ‘좋은’ 언론에 대한 이론적 모색」, 『한국언론학보』 50(5), 2006.
- 33) 장수찬, 「한 사회의 대인신뢰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8(1), 2002.
- 34) 이재혁, 「신뢰와 시민사회: 한미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40(5), 2006.
- 35) 안승국, 「아시아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아시아연구』, 10(2), 2007. 아시아 6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일본,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다.

및 규범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경험적으로 국가 비교분석을 진행한 경향이 강하다.³⁶⁾ 이러한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시기적으로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다. 당시에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제언과 신뢰하락이 지속되는 이유를 밝히려는 연구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연구의 목적도 신뢰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 정부성과에 대한 불만으로 민주주의의 탈공고화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연구는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³⁷⁾ 왜냐하면 한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민주주의를 재확인하고, 향후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 연구설계

1. 표본 설계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국 민주주의의

36) 박종민은 사회자본이 민주주의에 갖는 함의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 멤버십과 사회신뢰, 민주시민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다만 이 연구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보다는 시민들에 내재되어 신념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김강민은 신뢰가 갈등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경험적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종속변수인 갈등 민주주의를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으로 연구하였다. 즉, 민주주의가 아닌 갈등이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 여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박종민, 「사회자본과 민주주의: 집단 가입, 사회신뢰 및 민주시민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9(3), 2003; 김강민, 「신뢰가 갈등의 민주주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3), 2011.

37) Foa, R. S. & Mounk, Y., “The democratic disconnect”, *Journal of Democracy* 27(3) (2016).

평가에 따른 기관신뢰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의 시민들이 정부기관을 비롯한 정당, 언론, NGO 단체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은 동아시아연구원이 2017년 6월 11일부터 29일까지 '2017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켄론(言論)NPO에서 2017년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한일관계와 민주주의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명칭으로 설문이 시행되었다. 조사방법은 한국이 대면면접조사법, 일본이 방문유치회수법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표본추출에 대해서는 한국이 전국을 16개 행정구역별 광역단체 기준으로 분할하여 인구비례에 맞게 조사대상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일본은 전역 50개 지점으로 구분하여 한 지점 당 표본 수를 20명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다음의 <표 1>은 한일 양국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표 17> 한일 인구통계학 분석

| 특성 | 구분 | 한국(명) | 일본(명) |
|------|------------------------------|-------|-------|
| 성별 | 남성 | 499 | 486 |
| | 여성 | 504 | 514 |
| 연령 | 20세 미만 | 18 | 23 |
| | 20대 | 159 | 121 |
| | 30대 | 175 | 148 |
| | 40대 | 206 | 173 |
| | 50대 | 199 | 145 |
| | 60대 이상 | 238 | 390 |
| 학력 | 초등 및 중학교 | 148 | 83 |
| | 고등학교 | 377 | 465 |
| | 대학 재학/중퇴(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 136 | 191 |
| | 대학 | 323 | 222 |
| | 대학원 | 19 | 18 |
| | 기타(결측값 포함) | - | 21 |
| 월 소득 | 200만 원 미만(300만 엔 미만) | 177 | 277 |
| | 201-400만 원 미만(300-500만 엔 미만) | 425 | 288 |

| | | | |
|--|---------------------------------------|------|------|
| | 401-600만 원 미만(500-800만 엔 미만) | 312 | 228 |
| | 601-800만 원 미만(800-1,000만 엔 미만) | 52 | 84 |
| | 801-1,000만 원 미만(1,000만 엔-1,500만 엔 미만) | 21 | 45 |
| | 1,001만 원 이상(1,500만 엔 이상) | 14 | 7 |
| | 모름/무응답 | 2 | 71 |
| | 총 | 1003 | 1000 |

*구분에서 괄호 안은 일본을 대상으로 함.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남성이 499명, 여성이 504명이었고, 일본은 남성이 486명, 여성이 514명으로 양국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한국이 60대 이상이 238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40대가 206명, 50대가 199명의 순이었다. 일본 역시 한국과 유사하게 60대 이상이 390명으로 가장 많이 설문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40대가 173명, 30대가 148명의 순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학력은 한국과 일본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377명, 46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대학 졸업이 한국은 323명, 일본은 222명으로 2순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에서 월 소득은 201~400만 원의 비율이 4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1~600만 원이 312명, 200만 원 미만이 177명의 순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일본은 300~500만 엔 미만이 288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300만 엔 미만이 277명, 500-800만 엔 미만이 228명의 순이었다.

2. 변수 측정

본 연구의 목적은 자국 민주주의의 성과인식에 따라 각 기관별 신뢰의 차이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각 기관의 신뢰수준과 자국민주주의의 성과를 확인하였다. 기관의 신뢰는 총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기관은 대통령(수상)·법원·행정부·의회·정당·군대·경찰·언론·NGO·기업 등이다. 이 기관들의 신뢰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4점으로 구성

되었으며, ‘매우 신뢰함’, ‘대체로 신뢰함’,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으로 측정되었다.³⁸⁾ 자국의 민주주의 평가는 한국과 일본의 설문지 측정방식이 상이하다. 한국은 10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독재, ‘10’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측정하였다. 일본은 ‘작동하지 않음(1)’, ‘비교적 작동하지 않음(2)’, ‘비교적 작동함(3)’, ‘작동함(4)’으로 측정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위해서 한국의 10점 척도를 3점척도로 변환하였는데, ‘0~3’까지를 독재(1), ‘4~6’까지를 보통(2), ‘7~10’까지를 민주주의(3)로 재코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3점 척도로 자국의 민주주의 성과를 대별하였고, 일본은 4점 척도로 자국의 민주주의 성과를 구별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선 한일 양국의 기관신뢰와 자국 민주주의의 성과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관신뢰의 평균을 산정하여 한일 양국의 신뢰 평균을 비교분석하였고, 신뢰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ANOVA(일원분산분석)를 실시하여 자국 민주주의 평가에 따른 신뢰의 차이분석을 진행하였다.³⁹⁾

38) 설문조사에는 ‘매우 신뢰함(1점)’, ‘대체로 신뢰함(2점)’,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3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4점)’으로 측정되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가 높다는 것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 척도를 역으로 변환하였다. 즉, 4점이 매우 신뢰함, 1점은 전혀 신뢰하지 않음으로 변환하였다. 한편 일본은 ‘잘 모르겠음(5)’이 포함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측정치를 결측치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39)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을 같이 실시한다. 분산의 동질성 여부는 통계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 만약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Scheffe 검정결과를, 분산이 동일하지 않다고 가정하면 Dunnett의 T3 검

IV. 분석결과

1. 한국과 일본의 기관신뢰

1) 기관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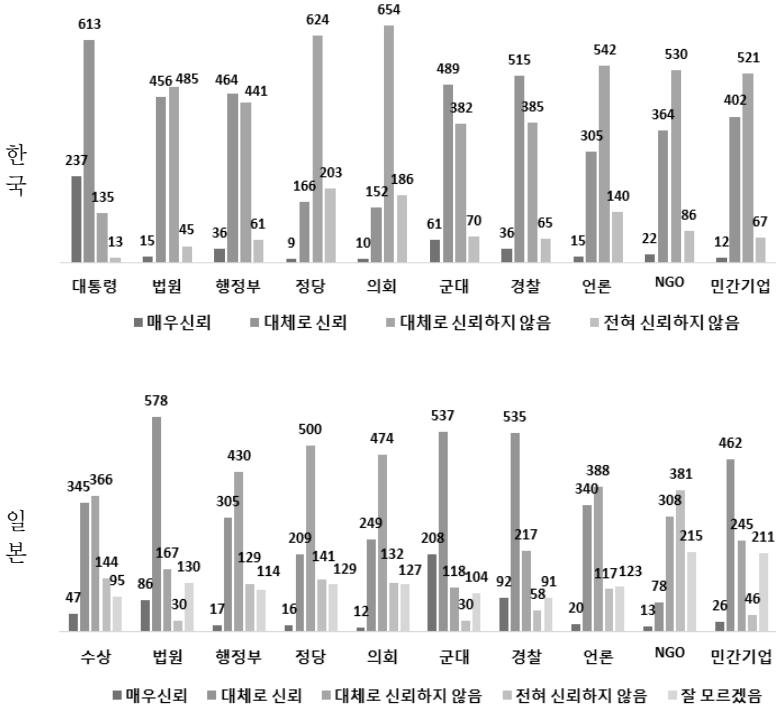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 시민의 기관신뢰는 다음의 <그림 1>에 제시되었다. 한국에서의 대통령 신뢰는 ‘대체로 신뢰함’에 응답한 인원이 많았다(613명). 일본의 수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뢰함’과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이 각각 345명, 366명으로 중간에 분포되었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신뢰가 높게 측정된 이유는 2017년 5월 대선이 지난 1달 후에 진행된 설문조사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⁴⁰⁾ 법원에 대한 신뢰는 한국이 ‘대체로 신뢰함(456명)’,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485명)’에 분포된 특징이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법원을 ‘대체로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578명). 한국에서 행정부에 대한 신뢰는 법원 신뢰와 유사하게 ‘대체로 신뢰함(464명)’과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441명)’에 분포되어 있었다. 일본 역시 행정부 신뢰는 대부분의 인원들이 ‘대체로 신뢰함(305명)’과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430명)’으로 인식하였다. 다만, 한국은 대체로 신뢰하는 인원이 많았으나, 일본은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 인원이 더 많았다. 그리고 입법을 담당하는 의회와 그 의회에서 활동하는 정당에 대한 신뢰는 양국 모두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에서 정당에 대해서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인원은 624명이었고 일본은 500명으로

정결과를 놓고 해석한다. 본 연구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할 때에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 40) 2017년 12월에 차기 대선이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대선을 치렀다. 기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전국 투표율 77.2% 중에 41.1%를 기록하였다.

측정되었다. 의회에 대해서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응답한 인원은 한국에서 654명, 일본은 474명으로 가장 많은 수로 확인되었다.

〈그림 1〉 한일 시민들의 기관신뢰 분포도



한편, 군대와 경찰에 대한 신뢰는 한일 양국 모두 ‘대체로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군대에 대한 신뢰가 ‘대체로 신뢰함(489명)’과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382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일본은 절반 이상의 인원들이 일본 군대인 자위대를 대체로 신뢰하고 있었다(537명). 경찰에 대한 신뢰는 한일 모두 절반 이상의 인원들이 대체로 신뢰하고 있었다. 한국은 515명, 일본은 535명이 이와 같이 응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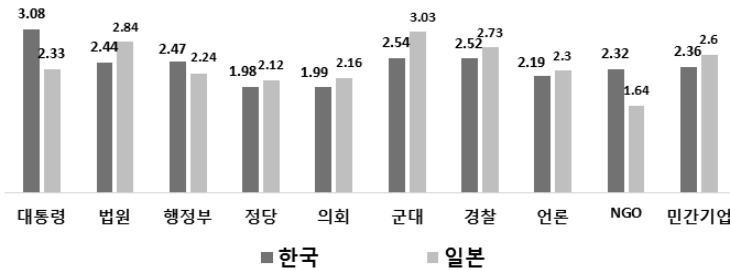
였다. 언론에 대한 신뢰는 한일 모두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 의견들이 많았다. 한국에서는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언론을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표시하였다(542명). 일본에서는 ‘대체로 신뢰함(340명)’과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388명)’에 분산되어 있지만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리고 NGO에 대한 신뢰는 한국에서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30명으로 절반이상이었고, 일본에서는 ‘전혀 신뢰하지 않음’의 의견이 381명으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신뢰는 한국에서 대부분이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였고(521명), 일본에서는 ‘대체로 신뢰함’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462명).

아래의 <그림 2>는 각 기관 신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다. 양국 시민들이 인식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는 모든 변수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일 시민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에서 한국에서 더 높은 신뢰 수준을 보인 기관은 대통령과 행정부, NGO 등이었다. 한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수상에 대한 신뢰는 한국평균이 3.08, 일본평균은 2.33으로 측정되었다. 이 신뢰에 대한 평균의 차이는 0.7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한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았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때가 국정농단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몇 달 안되는 시점이어서 대통령 신뢰가 높을 수 있겠으나 정권 초기 과거 정부에서도 통상 허니문 기간에 대통령 신뢰 수치가 높았던 관계로 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행정부에 대한 신뢰와 NGO에 대한 신뢰 역시 일본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행정부에 대한 신뢰의 평균은 한국이 2.47로 일본의 2.24보다 더 높은 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NGO에 대한 신뢰 역시 한국은 2.32, 일본은 1.64로 한국이 더 높았다. 이 두 기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한국에서의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조사가 정부 초기인 만큼 행정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고, NGO의 경우는 한국 NGO의

활발한 공익활동과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시민들이 기관신뢰에 대해서 한국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기관은 법원과 정당, 의회, 군대(자위대), 경찰, 언론, 민간기업 등이었다. 법원에 대한 신뢰는 일본이 2.84로 한국의 2.44보다 0.44 수준으로 더 높았다. 그리고 정당에 대한 신뢰도 일본(2.12)이 한국(1.98)보다 평균 0.14의 차이를 보였고, 의회에 대한 신뢰도 일본(2.16)이 한국(1.98)보다 0.18 수준 높게 신뢰하고 있었다. 한편, 군대(자위대)에 대한 신뢰는 일본이 3.03 수준으로 한국의 2.54보다 0.49 수준의 차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찰에 대한 신뢰는 일본이 2.73, 한국이 2.52이었고, 언론에 대한 신뢰는 일본이 2.30, 한국이 2.19로 일본의 시민들이 더 높게 인식하였다. 더불어 민간 기업에 대한 신뢰 역시 일본에서는 2.60이었고, 한국에서는 2.36로 평균 0.24 높게 일본에서 더 높게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한일 기관신뢰에 대한 평균 비교



참고: 일본의 '잘 모르겠음'은 결측치 처리함

한일 기관신뢰차이분석에서 모든 변수가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2) 기관신뢰 간의 상관관계

통상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들 사이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대개의 국가에서 특정 공공기관만이 두드러지게 불신을 받는 반면 다른

공공기관은 신뢰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일반 시민들은 특정 기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이기보다는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등의 기준을 가지고 신뢰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 스캔들이나 권력 남용 등과 같은 뉴스는 일시적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다. <표 2>의 아래 부분에서와 같이, 한국에서 각 기관에 대한 신뢰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민간 기업에 대한 신뢰 변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민간기업에 대한 신뢰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일본시민들이 인식하는 각 기관에 대한 신뢰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표 1>의 윗부분에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기관신뢰들은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기관의 신뢰의 상관관계 역시 서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한국과 유사하게 수상에 대한 신뢰와 언론에 대한 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 기관신뢰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상관계수)

| 일본 한국 | | 1 | 2 | 3 | 4 | 5 | 6 | 7 | 8 |
|----------|------|-------------|------|------|------|------|-------------|------|------|
| | | 수상 | 법원 | 행정부 | 정당 | 의회 | 언론 | NGO | 민간기업 |
| 1 | 대통령 | | .382 | .707 | .582 | .581 | .035 | .194 | .223 |
| 2 | 법원 | .308 | | .401 | .361 | .397 | .258 | .152 | .306 |
| 3 | 행정부 | .414 | .479 | | .738 | .710 | .138 | .279 | .274 |
| 4 | 정당 | .237 | .300 | .488 | | .717 | .202 | .383 | .294 |
| 5 | 의회 | .206 | .336 | .429 | .756 | | .178 | .297 | .290 |
| 6 | 언론 | .155 | .322 | .280 | .291 | .333 | | .204 | .247 |
| 7 | NGO | .112 | .215 | .247 | .236 | .278 | .365 | | .251 |
| 8 | 민간기업 | .044 | .178 | .183 | .181 | .235 | .331 | .537 | |

한국(아래): 대통령신뢰와 민간기업 신뢰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상관관계가 p(0.01수준에서 유의함)

일본(위): 수상신뢰와 언론신뢰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상관관계가 p(0.01수준에서 유의함)

2. 한일 시민의 민주주의 제도 및 성과 인식

1)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제도를 Linz and Stepan이 말하듯이⁴¹⁾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최근 가장 선진화된 민주국가에서 정부 성과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임과 정통성 부여가 약화되어 가는 ‘탈공고화(deconsolidation)’ 논의⁴²⁾가 있는 만큼 민주주의 체제나 제도 자체를 대체 불가능한 좋은 제도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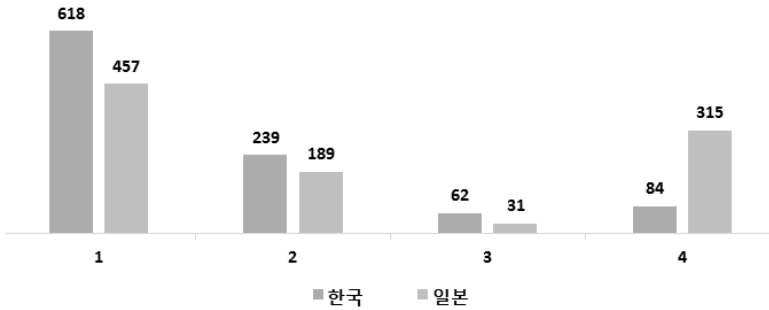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한일 모두 대부분의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정치제도보다 나은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은 618명 즉 62%가, 일본은 457명 즉 46%가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한국(239명)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가 ‘상황에 따라, 비민주적인 정치제도가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특징도 보인다.⁴³⁾ 한편 일본에서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평가를 유보하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인원이 한국의 84명보다 거의 4배에 이르는 315명에 달해 주의깊은 해석을 요한다. 이들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비교한다면,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 상황에 따라 비민주주의 허용, 어떤 체제든 상관 없다는 세 가지 견해의 비율은, 한국은 67%-28%-7%, 일본은 67%-28%-5%로 거의 비슷해진다. 한일 양국 시민들의 7할 가량이 여전히 민주주의 제도를 가장 좋은 정치제도로 간주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공고성의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이다.

41) Linz, J. J. & Stepan, A.,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JHU Press, 1996).

42) Foa and Mounk(2016).

43) 일본의 설문지에서는 ‘상황에 따라, 비민주적인 정치제도가 허용되어도 상관없다.’라고 측정되어 한국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림 3〉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인식



- 1: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정치제도보다 나은 제도
- 2: 상황에 따라, 비민주적인 정치제도가 허용되어야 한다.(일본: 허용되어도 상관없다)
- 3: 어떤 정치제도든 상관없다.
- 4: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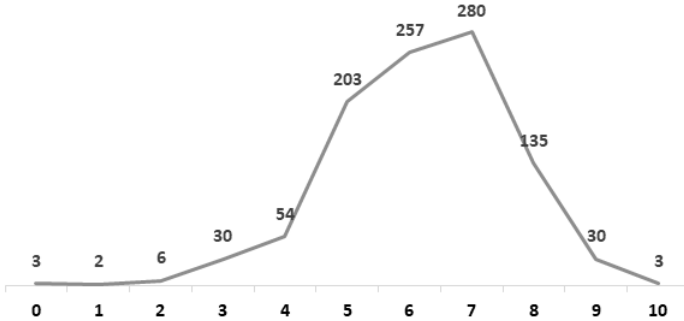
2) 자국 민주주의 성과에 대한 평가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는 별개로 자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에 대한 평가는 보다 비판적일 수 있다. 즉, 이상적 제도로서 민주주의 제도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통상 보다 비판적이다. 한일 양국의 설문응답자들이 자국의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지표 역시 설문응답지표의 상이함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자국 민주주의의 평가 수준은 지표에 대한 빈도부터 확인해보기로 한다.

한국인이 평가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1~10점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0'에 가까울수록 완전독재, '10'에 가까울수록 완전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 '7'점으로 응답한 인원이 280명으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5'와 '6'에 각각 203명, 257명이 응답하였다. 1003명 중에 약 70% 이상의 응답자가 5~7에 분포되어있다. 중간점인 5점을 기준으로 0에서 4까지의 부정적 비율이 7%라면 6에서 10까지의 긍정적 비율은 70%이

다. 한국 시민은 압도적으로 자국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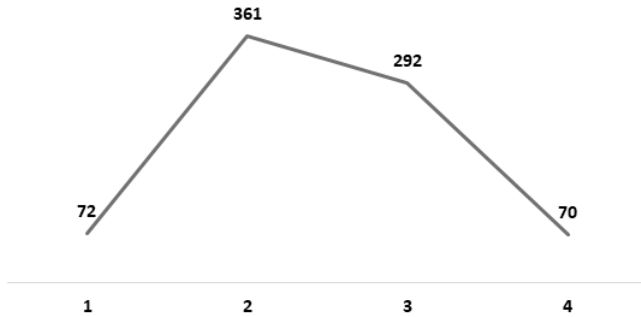
〈그림 4〉 한국 시민이 평가하는 한국의 민주주의



0~10까지 '0'에 가까울수록 완전독재, 10에 가까울수록 완전 민주주의
 평균: 6.20, 표준편차: 1.427

다음으로 일본인이 인식하는 일본의 민주주의 형태는 1~5까지의 점수로 측정되었다. '1'에 가까울수록 제대로 운영되고, '4'에 가까울수록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5'는 '모르겠다.'이다. 1000명의 일본인 중에서 361명이 잘 운영에 가깝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92명이 잘 운영되지 않는 편에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인원은 200명이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200명을 제외하고 1-4에 답한 응답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9%)와 '잘 운영되는 편에 가깝다(45%)'는 비율이 54%에 이르고, '잘 운영되지 않는 편에 가깝다(37%)'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9%)'라는 부정적 평가가 46%에 이른다.

〈그림 5〉 일본 시민이 평가하는 일본의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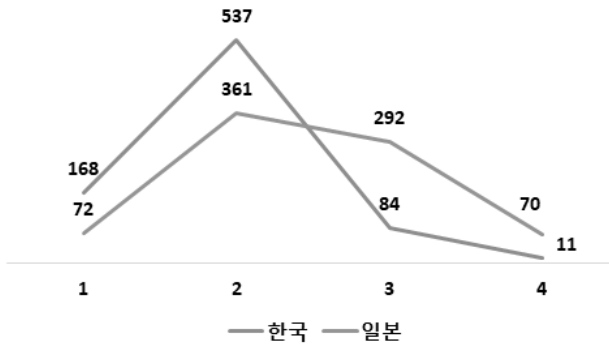
1: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 2: 잘 운영되는 편에 가깝다, 3: 잘 운영되지 않는 편에 가깝다,
4: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5: 모르겠다(제외).

평균: 2.45, 표준편차: 0.778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자국 민주주의의 성과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비교하고자 아래의 〈그림 6〉과 같이 한국의 설문결과를 재코딩하여 일본의 설문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1에 가까울수록 한국은 민주주의에 가깝고, 일본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4에 가까울수록 한국은 독재, 일본은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측정한 것이다. 한국의 설문결과에서 '5'는 중앙값으로 한일 자국 민주주의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위의 〈그림 7〉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대체로 자국이 민주주의에 가까우며, 잘 운영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 시민들 중에서 긍정적인 수치로 볼 수 있는 '1'과 '2'는 168명, 537명 등으로 전체 800명(결측치 203명 제외) 중에서 705명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부정적으로 인식한 95명('3'은 84명, '4'는 11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일본의 시민 역시 전체 800명('잘 모르겠다' 200명 결측치) 중에서 자국의 민주주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인원은 433명('1'과 '2'에 응답)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한 362명('3'은 292명, '4'는 70명)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에서 자국 민주주의 성과에 대한 인식

이 일본보다 높게 나온 것이 국정농단 사건에 항의하는 촛불정국과 이후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효능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시점에서의 양국 비교로 걸려질 필요가 있다.

〈그림 6〉 한일 자국 민주주의 성과 비교



한국의 설문응답에서 '0~2'의 범주는 '4'로, '3~4'는 '3'으로, '6~7'은 '2'로, '8~10'까지는 '1'로 재코딩하였고, '5'는 결측치로 처리함.

3. 자국 민주주의의 평가에 따른 신뢰 차이 분석

앞에서 보았듯이 기관신뢰와 민주주의 평가 사이에는 대개의 기관신뢰에서 상관관계가 높았다. 민주주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 신뢰에 특히 영향을 준다. 여기서는 민주주의 평가별로 어떻게 기관신뢰의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기관신뢰와 민주주의 평가 사이에 관계가 깊은지 점검해 보기로 한다.

한국의 시민들이 인식하는 민주주의의 평가수준에 따라 각 기관의 신뢰도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⁴⁴⁾ 한국의 민주주의 평가는 0~10까지 11점 척도를 활용하였고, '0'에 가까울수록 완전독재이고 '10'에 가까울수록 완전 민주

주의로 측정되었다. 여기서는 0-3까지를 독재, 4-6까지를 보통, 7-10까지를 민주주의로 재코딩하여 한국에서 현행 민주주의 성과 평가에 따라 기관신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자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에 따른 기관신뢰 분석(한국)

| 종속변수 | 민주주의 평가 | 평균(N) | 표준편차 | F값/유의확률 | 사후검증결과 |
|------|---------|-----------|-------|--------------|--------------------------|
| 대통령 | 독재(1) | 2.88(41) | 0.954 | 5.498/0.004 | 1<3, 2<3 (Scheffe 검증) |
| | 보통(2) | 3.03(511) | 0.630 | | |
| | 민주주의(3) | 3.14(446) | 0.627 | | |
| 법원 | 독재(1) | 2.05(41) | 0.805 | 19.518/0.000 | 1<2<3 (T3 검증) |
| | 보통(2) | 2.38(513) | 0.590 | | |
| | 민주주의(3) | 2.55(447) | 0.577 | | |
| 행정부 | 독재(1) | 2.05(41) | 0.893 | 16.183/0.000 | 1<2<3 (Scheffe 검증) |
| | 보통(2) | 2.42(513) | 0.663 | | |
| | 민주주의(3) | 2.58(448) | 0.623 | | |
| 의회 | 독재(1) | 1.68(41) | 0.722 | 7.862/0.000 | 1<2, 1<3 (Scheffe 검증) |
| | 보통(2) | 1.96(513) | 0.598 | | |
| | 민주주의(3) | 2.05(448) | 0.613 | | |
| 정당 | 독재(1) | 1.61(41) | 0.737 | 10.834/0.000 | 1<2<3 (Scheffe 검증) |
| | 보통(2) | 1.95(513) | 0.608 | | |
| | 민주주의(3) | 2.05(448) | 0.643 | | |
| 군대 | 독재(1) | 2.41(41) | 0.836 | 5.648/0.004 | 2<3 (T3 검증) |
| | 보통(2) | 2.48(513) | 0.699 | | |
| | 민주주의(3) | 2.62(448) | 0.713 | | |
| 경찰 | 독재(1) | 2.24(41) | 0.799 | 16.203/0.000 | 1<3, 2<3 (Scheffe 검증) |
| | 보통(2) | 2.43(512) | 0.691 | | |
| | 민주주의(3) | 2.65(448) | 0.614 | | |
| 언론 | 독재(1) | 1.68(41) | 0.687 | 19.518/0.000 | 1<2<3 (T3 검증) |
| | 보통(2) | 2.14(513) | 0.696 | | |
| | 민주주의(3) | 2.30(448) | 0.639 | | |
| NGO | 독재(1) | 2.00(41) | 0.671 | 13.465/0.000 | 1<3, 2<3 (Scheffe 검증) |
| | 보통(2) | 2.26(513) | 0.672 | | |
| | 민주주의(3) | 2.43(448) | 0.623 | | |

44)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통령신뢰와 행정부신뢰, 의회신뢰, 정당신뢰, NGO 신뢰에 한해서 분산이 동일하다고 나와서 Scheffe 검정을 진행하였다. 그 외의 변수인 법원신뢰, 언론신뢰, 민간기업 신뢰 등은 분산이 동일하지 않다고 가정하도록 결과가 나와서 Dunnett의 T3 검증을 실시하였다.

| | | | | | |
|------|---------|-----------|-------|--------------|---------------------|
| 민간기업 | 독재(1) | 2.12(41) | 0.678 | 12,868/0,000 | 1<3, 2<3 (T3 검증) |
| | 보통(2) | 2.29(513) | 0.620 | | |
| | 민주주의(3) | 2.46(448) | 0.605 | | |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민주주의 평가 수준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각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기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독재에 가까울수록 기관에 대한 신뢰는 저하되고 있었다. 즉, 이 설문 응답자인 1003명의 시민들은 한국사회가 민주화된 사회라고 인식할수록 대통령·법원·행정부·의회·정당·군대·경찰·언론·NGO·민간 기업에 대한 신뢰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민주주의 평가 수준에 따라 각 기관의 신뢰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수행하였다.⁴⁵⁾ 일본의 설문 문항에서 민주주의를 평가할 때에는 1~4점으로 측정하였고, '잘 모르겠다.'(5점)라는 질문을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분석의 엄밀성을 위해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표본을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일본의 설문문항은 '1'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이고, '4'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한국의 차이분석과는 상이하게 일본 설문문항에서는 1~4점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언론기관을 제외하고 일본에서도 현행 민주주의가 잘 작동된다고 인식할수록 기관신뢰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1,000명 중 800명(200명 결측치 제외)의 일본 시민들이 일본사회가 민주주의라고 인식할수록 수상·법원·행정부·의

45) 앞선 한국의 분석과 동일하게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사후검증을 Scheffe 방법 혹은 Dunnett의 T3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기관 신뢰 변수가 분산이 동일하게 나타나서 사후검증을 위해서 Scheffe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정당·군대·경찰·민간 기업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졌다. 다만, NGO에 대한 신뢰는 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⁴⁶⁾

〈표 4〉 자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신뢰 분석(일본)

| 종속변수 | 민주주의 평가 | 평균(N) | 표준편차 | F값/유의확률 | 사후검증결과 |
|------|---------|-----------|-------|---------------|--|
| 수상 | 1 | 1.40(68) | 0.672 | 132.796/0.000 | 1<2<3<4 (Scheffe 검증) |
| | 2 | 2.01(278) | 0.655 | | |
| | 3 | 2.59(344) | 0.681 | | |
| | 4 | 3.30(70) | 0.622 | | |
| 법원 | 1 | 2.38(64) | 0.864 | 23.023/0.001 | 1<2, 1<3, 1<4, 2<4, 3<4 (Scheffe 검증) |
| | 2 | 2.79(268) | 0.607 | | |
| | 3 | 2.93(329) | 0.565 | | |
| | 4 | 3.22(65) | 0.625 | | |
| 행정부 | 1 | 1.47(68) | 0.657 | 94.564/0.000 | 1<2<3<4 (Scheffe 검증) |
| | 2 | 2.02(278) | 0.621 | | |
| | 3 | 2.49(338) | 0.617 | | |
| | 4 | 2.97(66) | 0.632 | | |
| 의회 | 1 | 1.59(68) | 0.652 | 59.548/0.000 | 1<2<3<4 (Scheffe 검증) |
| | 2 | 1.97(272) | 0.604 | | |
| | 3 | 2.35(333) | 0.629 | | |
| | 4 | 2.79(67) | 0.686 | | |
| 정당 | 1 | 1.58(67) | 0.655 | 60.524/0.000 | 1<2<3<4 (Scheffe 검증) |
| | 2 | 1.90(271) | 0.568 | | |
| | 3 | 2.30(335) | 0.619 | | |
| | 4 | 2.75(65) | 0.771 | | |
| 군대 | 1 | 2.68(62) | 0.919 | 10.978/0.000 | 1<2, 2<3, 3<4, 2<4, 3<4 (Scheffe 검증) |
| | 2 | 3.00(272) | 0.674 | | |
| | 3 | 3.10(345) | 0.665 | | |
| | 4 | 3.35(66) | 0.734 | | |
| 경찰 | 1 | 2.36(64) | 0.824 | 21.016/0.000 | 1<2, 2<3, 3<4, 2<4, 3<4 (Scheffe 검증) |
| | 2 | 2.66(276) | 0.645 | | |
| | 3 | 2.79(346) | 0.711 | | |
| | 4 | 3.27(67) | 0.709 | | |

46) 일원분산분석에서 NGO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의 평가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지만, Scheffe의 사후검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결과가 도출되었다.

| | | | | | |
|------|---|-----------|-------|-------------|-------------------------------|
| 언론 | 1 | 2,17(66) | 0,736 | 0,972/0,405 | - |
| | 2 | 2,32(267) | 0,725 | | |
| | 3 | 2,33(337) | 0,716 | | |
| | 4 | 2,35(65) | 0,891 | | |
| NGO | 1 | 1,50(60) | 0,597 | 3,245/0,022 | 유의미하지 않음 (Scheffe 검증) |
| | 2 | 1,60(239) | 0,671 | | |
| | 3 | 1,70(301) | 0,776 | | |
| | 4 | 1,86(63) | 0,931 | | |
| 민간기업 | 1 | 2,30(60) | 0,766 | 8,660/0,000 | 1<2, 1<3, 1<4 (Scheffe 검증) |
| | 2 | 2,56(241) | 0,681 | | |
| | 3 | 2,70(307) | 0,567 | | |
| | 4 | 2,78(60) | 0,666 | | |

잘 모르겠음(5) 200 삭제

1: 작동하지 않음, 2: 비교적 작동하지 않음, 3: 비교적 작동함, 4: 작동함

* 사후검증에서 언론은 일원분산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NGO는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지만, 사후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관신뢰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신뢰는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언론과 NGO, 민간 기업 등의 신뢰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자국의 현행 민주주의 성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로 각 변수에 대한 빈도 확인과 한일 양국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관신뢰에 대한 한일 차이분석에서 모든 기관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은 대통령(수상), 행정부, NGO 기관에 대해서 일본보다 신뢰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법원, 정당, 의회, 군대(자위대), 경찰, 언론, 민간 기업에 대해서 한국보다 신뢰수준이 높았다. 대통령(수상)과 행

정부 신뢰가 한국에서 일본보다 높고, 의회와 정당에 대한 신뢰가 일본에서 한국보다 높은 것은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라는 상이한 권력구조의 영향을 반영한 것인지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NGO에 대한 신뢰가 한국에서 더 큰 이유는 권력감시와 제도개혁에 있어 한국 NGO의 역할이 일본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제도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한국의 시민들이 일본의 시민보다 보다 강한 정도로 민주주의가 여타 정치제도보다 나은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자국의 민주주의 평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 모두가 현행 민주주의가 민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자국 현행 민주주의의 평가에 따른 기관신뢰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 시민들은 한국이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인식할수록 기관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 시민들도 일본이 민주주의에 가까울수록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아졌지만, 언론에 대한 신뢰는 자국의 민주주의 평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기관신뢰와 현행 민주주의 평가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양국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각 신뢰의 경우는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각 공공기관 신뢰 모두 민주주의 평가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 점에서 기관신뢰와 민주주의 성과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가설이 다시 증명된 셈이다.

본 논문은 각 변수별 인과관계를 분석하기보다는 한일 양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기관별로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와 현행 민주주의 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신뢰와 민주주의 평가 인식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확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다 심층적 인과관계 분석이 어려웠던

이유는 양국의 설문지 문항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척도가 상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신뢰와 민주주의 간의 실증 연구가 부족했던 만큼 탐색적 연구로 의미를 지닌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7년 11월 5일

논문 심사일 : 2017년 12월 3일

게재 확정일 : 2017년 12월 15일

참고문헌

- 김강민, 「신뢰가 갈등의 민주주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3), 2011.
- 김세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신뢰: ‘옳은’ 언론과 ‘좋은’ 언론에 대한 이론적 모색」, 『한국언론학보』 50(5), 2006.
- 박성진, 「한국 사회 신뢰의 악순환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동향과 전망』 58, 2003.
- 박종민, 「사회자본과 민주주의: 집단가입, 사회신뢰 및 민주시민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9(3), 2003.
- 박종민 · 김왕식,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 2006.
- 송경재, 「동아시아 국가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시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32, 2007.
- 안승국, 「아시아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아시아연구』 10(2), 2007.
- 이수인, 「정부신뢰에 대한 정치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효과 비교와 관계성의 탐색: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9(2), 2013.
- 이재열,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 사상』 37, 1998.
- 이재혁, 「신뢰와 시민사회: 한미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40(5), 2006.
- 장수찬, 「한 사회의 대인신뢰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8(1), 2002.
- 장수찬,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한국정치학회보』 36(1), 2002.
- 장수찬, 「한국 사회의 신뢰수준의 하락과 그 원인: 국가 간 비교 분석적 관점에서」, 『세계지역연구논총』 25(3), 2007.
- 한준, 「민주주의, 제도와 신뢰」, 『신뢰연구』 13(2), 2003.
- Almond, G. & Verba, S.,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 Armington, K. & Guthmann, K., “Democracy in crisis? The declining support for national democracy in European countries, 2007-2011”,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3(3)(2014).
- Bauer, P. C. & Fatke, M., “Direct democracy and political trust: Enhancing

- trust, initiating distrust-or both?",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20(1)(2014).
- Boix, C. & Posner, D. N., "Social capital: Explaining its origins and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4) (1998).
- Braithwaite, V., "Communal and exchange trust norms: Their value base and relevance to institutional trust", In Braithwaite V and Levi M. editors(de). *Trust and governance*(Russel Sage Foundation, 1998).
- Braithwaite, J., "Institutionalizing distrust, enculturating trust", In Braithwaite V and Levi M. editors(de). *Trust and governance* (Russel Sage Foundation, 1998).
- Brehm, J. & Rahn, W.,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1997).
- Coleman, J. 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1988).
- Foa, R. S. & Mounk, Y., "The democratic disconnect", *Journal of Democracy* 27(3)(2016).
- Freitag, M. & Ackermann, K., "Direct democracy and institutional trust: Relationships and differences across personality traits", *Political Psychology* 37(5)(2016).
- Heimer, C. A., "Solving the Problem of Trust", K. S. Cook, *Trust in Societ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2001).
- Kim, U., Helgesen, G. & Ahn, B. M., "Democracy, Trust, and Political Efficacy: Comparative Analysis of Danish and Korean Political Culture", *Applied Psychology* 51(2)(2002).
- Knack, S.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02).
- Levi, M., "A state of trust", In Braithwaite V and Levi M. editors(de). *Trust and governance* (Russel Sage Foundation, 1998).
- Linz, J. J. & Stepan, A.,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JHU Press, 1996).
- Luhmann, N., "Familiarity, confidence, trust: Problems and Alternatives", In D. G. Gambetta (de).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New York: Basil Blackwell, 1988).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1995).
- Mishler, W. & Rose, R., "What are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Testing institutional and cultural theories in post-communist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1)(2001).
- Newton, K.,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1997).
- Newton, K. and Norris, N.,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Faith, Culture, or Performance?" in Susan Pharr and Robert Putnam (eds).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2000).
- Newton, K.,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2001).
- Ostrom, E. and Ahn, T. K., *Foundation of Social Capital*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03).
- Putnam, R.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Rothstein, B. & Stolle, D., "Introduction: social capital in Scandinavia",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6(1)(2003).
-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 & Camerer, C.,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1998).
- Stolle, D., "The Sources of Social Capital." in Marc Hooghe and Dietlind Stolle (eds.),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 Sztompka, P., *Trust: A sociologic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Tavits, M., "Making democracy work more? Exploring the linkage between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 performanc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9(2)(2006).
- Tyler, T. R., "Trust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Braithwaite V and Levi M, editors(de). *Trust and governance* (Russel Sage Foundation(1998).
- Verba, Sidney, Kay Lehman Schlozman & Henry E, Brady.,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 Whittington, K. E., "Revisiting Tocqueville's America: Society, politics, and

associ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1)(1998).

Zmerli, S. & Newton, K., “Social trust and attitudes toward democracy”, *Public opinion quarterly* 72(4)(2008).

Abstract

Institutional Trust and Democracy Perceptions in South Korea and Japan

Sook-Jong Lee

This study compares the citizens' trust in institutions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is institutional trust's relationship with the citizens' perception on their country's democratic performance. South Koreans tend to trust their president, government, and NGOs more than Japanese while Japanese trust courts, political parties, military, police, media, and corporations more than South Koreans. Most of South Koreans and Japanese view their democracy functions well. As many previous studies have maintained, the more South Koreans and Japanese view their democracy functions well, their trust level in institutions has increased. This comparative analysis contributes to providing some empirical findings on the trust and democracy studies of South Korea and Japan.

Key words

South Korea-Japan Comparison, Public Opinion, Institutional Trust, Democratic Performance, Democracy